

광주 전세버스노조 “불법 자행 업체, 강력 처벌하라”

기자회견 열어… “전세버스 업체, 법 악용해 기사 착취… 행정당국은 면히 취소해야”

전세버스 기사들이 경찰과 행정당국을 향해 불법 행위가 확인된 전세버스 업체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촉구하고 나섰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서비스일반노조 전세버스연대지부 광주지회는 4일 오전 광주 북부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경찰은 불법 행위를 일삼은 광주지역 전세버스 업체 A사에 대해 수사를 확대하고 행정당국은 면허를 취소해야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노조는 “전세버스 운영 업체들은 자신들이 버스를 구매해 사업을 하기에는 돈이 많이 든다는 이유로 버스를 가지고 있는 차주들의 명의를 빌리고 있다”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전세버스를) 운송사업자의 명의로 빌리는 형태로 불법 운영할 경우 업체는 물론 차주들도 함께 처벌 대상이 된다는 양벌 규정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A사는 지입차주들이 노조 활동을 한다는 이유로 배차를 배제하고 차량대금 대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정산금을 착취했다”며 “양벌 규정이 있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을 악용해 차주들을 착취하고 이용 대상으로 삼아왔다”고 지적했다.

또 “경찰은 소득세와 보험 할증료를 부당하게 공제했다는 제보, 허위 정산 자료 작성 정황이 있음에도 불법 지입 의심 차량 중 5대만 확인한 뒤 수사를 종결했다”며 “이대로 라면 불법 행위가 확인된 5대



민주노총서비스연맹서비스일반노조전세버스연대지부 광주지회가 4일 오전 광주 북부경찰서 앞에서 경찰을 향해 불법을 자행한 지역 전세버스 업체에 대한 강력 처벌을 촉구하고 있다. /뉴스

에 대해서만 감차 조치된 채 끝난다. 해당 업체가 운영하는 나머지 50대 이상의 의심 차량에 대해서도 수사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보다 근본적인 조치는 불법을 자행한 업체의 면허 취소와 강력 처벌”이라며 “경찰은 수사를 즉각 확대하고 북구도 운수사업 면허를 취소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말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등의 혐의로 A사 관계자와 전세 버스 차주 등 총 4명을 불구속 송치했다. 이들은 2022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여객운수사업법이 제한하는 지입 계약을 맺고 전세버스를 운용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A사 관계자들은 버스 기사들에게 소득세와 사고 차량에 대한 보험 할

증료를 일부 부당 공제하거나 기사들이 차량을 매각한 뒤 발생한 대금을 약속된 기일이 지나도록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차주들도 A사에 사업자 명의를 빌려준 정황이 확인됐다. 광주 북구로부터 고발장을 접수받아 수사에 나선 경찰은 혐의가 입증된다고 보고 A씨 등을 검찰로 송치했다. /뉴스



‘청산거리 마걸리 살인 사건’으로 중형을 선고받았던 백모(71·오른쪽)와 딸(41)이 28일 오후 광주 동구 광주지법에서 열린 재심 선고 공판 결과 무죄를 선고받은 뒤 취재진 인터뷰를 하고 있다. 백씨와 딸은 지난 2009년 청산거리를 넣은 마걸리를 아내와 지인에게 마시게 해 숨지게 한 혐의(존속살인 등)로 2012년 대법원에서 각기 무기징역과 징역 20년형을 선고받았으나 검찰의 강압수사 의혹이 불거지면서 2023년 9월 재심이 개시, 이날 사건 발생 16여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았다. /뉴스

검찰 ‘순천 청산거리 살인’ 재심 상고 포기 검찰 ‘수사 중 국민 기본권 제대로 보장 못했다’ 사죄 백씨 부녀 무죄 확정 수순… 16년 전 사건 진범 찾을까

2009년 발생한 이른바 ‘청산거리 마걸리 살인 사건’으로 중형이 확정됐다. 16년 만의 재심에서 무죄를 인정 받은 부녀(父女)에 대해 검찰이 상고를 포기했다. 이에 따라 부녀의 무죄 판결은 확정된다.

검찰은 4일 “광주고법이 ‘순천 청산거리 마걸리 살인 사건’ 재심에서 무죄로 판결한 데 대해 재판부의 판단을 겸허히 수용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특히 “당시 검찰 수사 과정에서 객관적 증거 없이 피고인들에게 자백을 유도한 점, 진술거부권을 명확히 고지하지 않았다는 점, 합리적 이유 없이 수갑·포승으로 피고인들을 결박한 상태에서 조사를 진행한 점 등 형사소송법 절차나 피고인에 대한 권리가 충분히 보장되지 않았다는 재판부 지적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자세를 낮췄다.

이어 “적법 절차에 따라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자세로 실제적 진실을 발견해야 할 검찰이 본연의 소임을 다하지 못하고 국민 기본권을 제대로 보장하지 못했던 점을 깊이 반성한다”며 “오랜 기간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겪었을 백씨 부녀와 그 가족들에게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검찰은 나아가 피고인들에 대한 보상 절차, 명예회복 조치가 신속하고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의지도 표명했다.

앞서 지난달 28일 광주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이의영)는 존속살해 등 혐의로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20년형이 확정됐던 백모(75)씨와 백씨의 딸(41)의 재심에서 각기 무죄를 선고했

다. 사건 발생 16년 만에 억울한 누명을 벗은 것이다.

백씨 부녀는 서로 공모해 2009년 7월 6일 전남 순천시 한 마을에서 청산거리를 넣은 마걸리를 아내 최모(당시 59세)씨와 최씨의 지인에게 마시게 해 2명을 숨지게 하고, 함께 마신 주민 2명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부녀의 자백 진술에 신빙성이 없는 점 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지만, 2심은 유죄로 판단을 뒤집었다. 2012년 3월 대법원은 2심과 마찬가지로 아버지 백씨에게 무기징역, 딸에게는 징역 20년을 선고해 형이 확정됐다.

그러나 범행에 쓰였다는 마걸리 구입 경위가 불확실한 점, 청산 입수 시기·경위와 법의학 감정 결과가 명확히 일치하지 않았던 점, 부녀의 진술 태도와 달리 검찰 작성 조서는 구체적으로 기재된 점 등 의혹이 끊이지 않았다.

특히 재심 재판부도 강압 수사를 통해 확보된 주요 자백 진술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며 부녀의 손을 들어줬다.

재심 재판부는 “지적 능력, 학력, 경력, 사회적 지위 등을 살펴볼 때 딸 백씨는 지능지수 74점 정도의 경계성 지능을 가졌다. 그럼에도 검찰 수사 과정에서 여러 진술 조사 작성 과정에 신뢰관계자 동석이 이뤄지지 않은 점, 진술 거부권이 고지되지 않은 점, 자백 진술의 개인성을 볼 때 수사기관이 유도 심문을 반복적으로 했던 점이 인정된다”고 지적했다. /뉴스

광주소방, 겨울철 선제적 화재예방대책 시행

최근 5년간 겨울철 화재 연평균 179건… 인명피해 최소화 총력

내년 2월까지 산단·대형공사장 등 집중 점검… 불조심 캠페인도

명, 재산피해는 약 11억5000여만원으로 집계됐다.

주요 화재 원인은 부주의(48.3%)가 가장 많았으며 전기적 요인(20.9%), 기계적 요인(14.0%)이 뒤를 이었다. 부주의 유형으로는 담배꽂초, 기기사용 부주의, 음식

물 조리, 불씨·불꽃 방치 순이었다. 이에 따라 광주소방안전본부는 대형화재 예방과 인명피해 저감을 목표로 ▲산단·사업장 안전점검, ▲대형공사장 안전관리 강화 등 선제적 예방활동을 펼친다. 또 전통시장 자율소방대의 심야시간 예방순찰과 초기 대응훈련을 강화하고, 외국인 근로자 대상 화재대피 교육, 주거취약시설 현장 행정지도 등 취약계층 안전 확보에도 주력한다.

아울러 11월을 ‘불조심 강조의 달’로 지정해 시민 참여형 홍보활동을 추진한다. 어린이 불조심 포스터 공모전, 소방차 길터주기 캠페인, 광주소방 현장활동 사진 순회 전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이벤트 등을 통해 시민의 관심과 참여를 높일 계획이다. /오권철 기자

광주·전남 병원·초등학교서 화재 잇따라… 긴급 대피

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다. 또 지난 3일 오후 9시 27분께 신안군 한 섬의 A(85)씨 주택에서 불이나 가구 등 70㎡를 태우고 소방서 추산 2900여만원의 재산피해를 낸 뒤 진화됐다. 화재로 A씨가 연기를 흡입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소방당국은 전기 멀티탭에서 불이 시작된 것이 아냐고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다. 앞서 같은날 오후 3시 10분께 화순군 동

면 한 공장에서 불이나 건물 1동 320㎡를 태우고 소방서 추산 3700여만원의 재산피해를 낸 뒤 40여분만에 진화됐다.

또 지난 3일 오후 1시 29분께 완도군 고급면 한 초등학교에 불이났으며 1·2·3층 계단 벽면과 천정 등 200㎡를 태우고 화재 발생했다. 불이나자 학생 94명과 교사 27명 등이 긴급대피해 인명피해는 없었다. /전민규 기자

(주)통일화물은 정성과 책임으로 늘 변함없이 고객여러분을 모시겠습니다

책임있는 물류문화를 만들어가는데 앞장서는 (주)통일화물
나보다 고객을 먼저 배려하는 아주 특별한 만남
이제 (주)통일화물을 만나보십시오.

(주)통일화물이 힘찬 도약을 시작합니다

- 취급차량 : 1t~12t
- 중앙지 및 지방지 신문수송전문
- 정보지 · 신문 광고대행
- 광고전단지 운송 · 배포
- 일반이사 및 포장이사전문
- 기업물류 운송 전문

광주광역시 광산구 우산동 1573-1번지 3층 ☎(062) 956-8500~2 Fax(062) 956-2001